



보도 일시	'22.7.13(수) 11:30	배포 일시	'22.7.13(수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공동총괄>	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	책임자	과 장	구자영 (044-215-4630)
		담당자	서기관	김종현 (drkjh51@korea.kr)
			사무관	류한솔 (feelrhs@korea.kr)
담당 부서 <공동총괄>	법무부 상사법무과	책임자	과 장	임철현 (02-2110-3167)
		담당자	검 사	정성두 (sdchung88@spo.go.kr)
			사무관	윤화섭 (anais0324@korea.kr)

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

- 법무처, 형벌규정 일제 점검 및 개선 추진 -

-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'22.7.13.(수) 10:3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경제 형벌규정 개선 TF」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였음

<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개요 >

- ▶ 일 시 : 2022. 7. 13.(수) 10:30
- ▶ 장 소 : 정부서울청사, 정부세종청사(영상연결)
- ▶ 참석자 :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, 이노공 법무부 차관(공동 주재)
환경부 차관, 국토부 1차관, 공정위 부위원장, 문체부 기조실장,
금융위 상임위원 등

-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
 - 이에 지난 6.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 제재 전환,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하였고,
 - 그 후속조치로서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고, 추진계획을 논의·확정하였음

□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, 각 부처*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출범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

* 과기정통·행안·문체·농식품·산업·복지·환경·국토·해수, 공정·금융위, 식약처 12개 부처

-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,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하였고, 대상 규정을 지속 발굴할 계획
-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여,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함

< 검토기준 >

- ①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·최소한의 형벌인지
- ②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
- ③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
- ④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
- ⑤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

< 개선방향 >

- ① **(비범죄화)** 국민의 생명,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
- ② **(합리화)**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①과도한 형량 완화, ②先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, ③책임의 경중(미수/기수, 상해/사망 등)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

□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,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확정할 계획임

- 아울러,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 함으로써 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

※ (별첨)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